

주요 그룹, AX 속도낸다… 업무체계 등 기업운영 전반 혁신

SK그룹 오늘 '뉴 이천포럼' 개최
삼성 관계사 모든 업무에 AI 도입
현대차 자율주행 등 AI 기술 고도화
LG 품질관리 등 현장주도 실행

국내 주요 그룹들이 인공지능(AI) 전환(AI)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AI 기술을 제품과 서비스 등에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사내 업무 방식 전반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공통된 목표다. 삼성이 전 관계사 업무 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할 것을 발표하자 SK도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AI 대전환 방안 모색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은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강화에 집중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11일~13일까지 경기 이천 SKMS 연구소에서 '2026 뉴 이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AI가 가져올 파괴적 혁신, AI 중심 경영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다.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석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그룹 경영진



SK그룹은 오는 13일까지 '2026 뉴 이천포럼'을 개최한다. SK그룹 서린사옥 전경.

50여명이 참석한다.

AX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도구로 AI를 쓰는 수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경영 방식과 조직 운영 체계를 AI에 맞춰 바꾸는 게 핵심이다. SK가 2박3일 일정 전체를 AX 논의에 배정한 것도 AI 경쟁이 제품 개발이나 투자 전략뿐 아니라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포럼은 기존 '경영전략회의'와 '이천포럼'을 통합한 첫 행사다. SK는 매년

6월 주요 경영진이 모여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그룹 차원의 생존·성장 방안을 논의하는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해왔다. 8월엔 구성원과 국내외 전문가가 글로벌 산업 트렌드, 혁신기술, 미래 사업 방향을 토론하는 이천포럼을 열었다.

SK에 앞서 삼성도 전날 'AI 대전환'을 선언했다. 삼성은 전 관계사의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 판매, 서비스, 경영지원 등 8대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AI를 적용

해 경영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엔 이달 중 전 관계사에 제미니·챗GPT·클라우드 등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를 공식 도입한다. 정보 유출, 업무 위험 요인을 통제할 보안 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각 관계사의 직무·조직 특성에 맞춘 세부 운영 정책도 준비하고 있다.

경영진 교육도 병행한다. 삼성은 전 관계사 사장단 50여명을 대상으로 AI 집중 교육인 'AX 부트캠프'를 실시한다. 전 관계사 임원 2300여명은 오는 8월12일까지 차수별 2박3일 교육을 받는다. 올해 안에 사장단과 임원을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교육을 마칠 예정이다.

삼성 전 관계사는 각 사업 특성에 맞는 AX 추진 전략을 세우고 데이터, 모델 운영 관리, AI 인재 육성 등을 이끈 AI 점담 조직도 신설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 역시 정이현 회장의 전략에 맞춰 AX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 회장은 올해 신년 좌담회에서 "AI를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기업 진화의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에 미래가 달려있다"며 "다가올 미래에도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유일한 길

은 AI를 외부가 아닌 조직 내부의 생명력으로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신설한 'AI 거버넌스 TFT(태스크포스팀)'는 그룹 AI 전환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현대차와 기아가 AI 기술을 적용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현대위아 등도 직원 대상 AI 활용 능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

LG그룹의 AX는 업무 시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품질 관리, 데이터 보안, 현장 주도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구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AI의 무게중심이 현실 세계에서 구동되는 피지컬 AI로 확장되면서 로봇과 전장, 기업용 AI 사업이 주목 받고 있다.

구광모 회장은 지난 3월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AX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전제한 뒤 "완벽한 계획보다 빠른 실행이 필요하기에 사업의 임팩트가 있는 곳에서 시작은 것이라도 빠르게 실행해 성과를 축적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정부, 빈부격차 완화·민생안정 등 적극재정 정책 추진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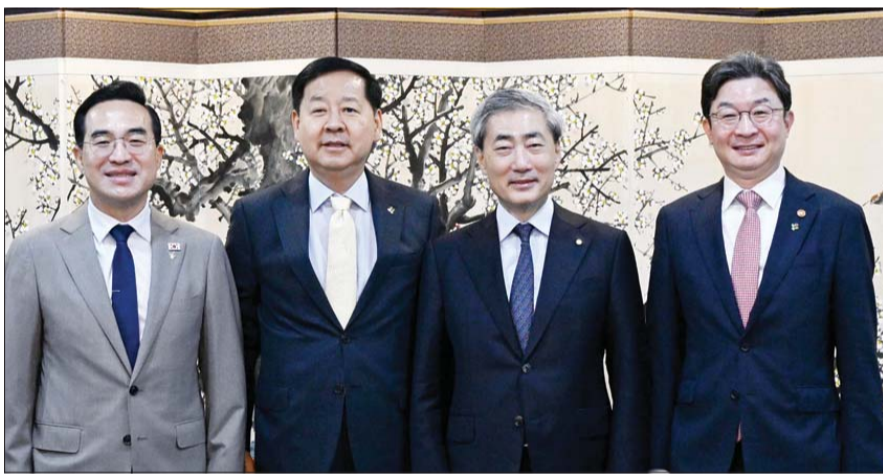
세입증가 예상… 재정 여력 미래투자
구윤철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

세수입 증가에 따라 불어날 재정의 상당 비중이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에 할애된다. 또 빈부격차 완화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적극재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갖고 거시·재정·금융분야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덕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에 따라 향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확대되는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잠재성장률 관련한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1.5% 선을 하회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다. 반도체 경기 호황기와 맞물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뛰었지만, 노동·자본 등의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국제기구 OECD의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절

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간 공조 확대를 통해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배포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차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출 기업, 주기변동성 확

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등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범위를 넓힌 첫 회의다. 새로 부임한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 정부는 안전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의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주재하고, 중동전쟁 이후 인프라 복구 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금융자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주요국은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수요 및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 발주처 대상 통합 마케팅 등 민관협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선금융지원 등 국가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함께,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공정위, 삼성중공업 하도급 위반 혐의 동의를결 결정

113억 규모 상생협력안 받아들여

선박 제조 과정에서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먼저 지시하는 이른바 '구두 발주' 혐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삼성중공업이 법적 처벌을 받는 대신 113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동의를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를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발표했다.

동의를결이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및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협력사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뒤늦게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서

면 지연발급)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삼성중공업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수급사업자들과의 거래 관계를 개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12월 동의를결을 신청했다.

삼성중공업은 우선 구두 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하도급 계약서 전면 사용 및 임직원·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협력사 근로자들을 위해 ▲동반

지원금 인상(연 30.5억 원) ▲명절 귀향비·휴가비 신설(연 52.5억 원)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근로자 160만 원 납입 시 800만 원 수령 등 20억 원) ▲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내년학자금 등 기존 20억 원에서 10억 원 증액) 등 총 113억 원 규모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삼성중공업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를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 1면 'GNI 뚝인데...'서 계속

반도체가 끌어올린 소득 실질 구매력 개선 '시차'

◆ 물가·환율·금리가 소득 개선 둘러

문제는 거시지표 개선이 곧바로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계 체감과 가까운 지표는 국민소득보다 더 무겁다. 가계 1인인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뜻하는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은 지난해 2만515달러로 3년 연속 2만 달러 초반대에 머물렀다. 원화 기준으로는 늘었지만, 달러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명목지표 안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 1분기 피용자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지만, 총영업이익은 29.9% 증가했다. 수출 가격 상승과 기업 수익성 개선이 명목 성장률을 먼저 끌어올린 반면, 가계 소득과 체감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 여건도 녹록치 않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올라섰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60원선을 넘어서며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환율 상승은 원유와 원자재 수입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는 석유류와 공업제품, 서비스 가격으로 번질 수 있다.

금리 환경 역시 부담이다. 한은은 최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내놨다. 성장률과 국민소득 지표가 개선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명분은 약해지고, 반대로 물가와 환율 부담은 금리 인상 논리를 강화할 수 있다.

반도체가 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고환율과 물가, 금리 부담이 남아 있는 한 체감경기 회복 속도는 거시 지표가 보여주는 숫자보다 더딜 수밖에 없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진입 여부 만큼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가계의 실질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김주형 기자 gh47@